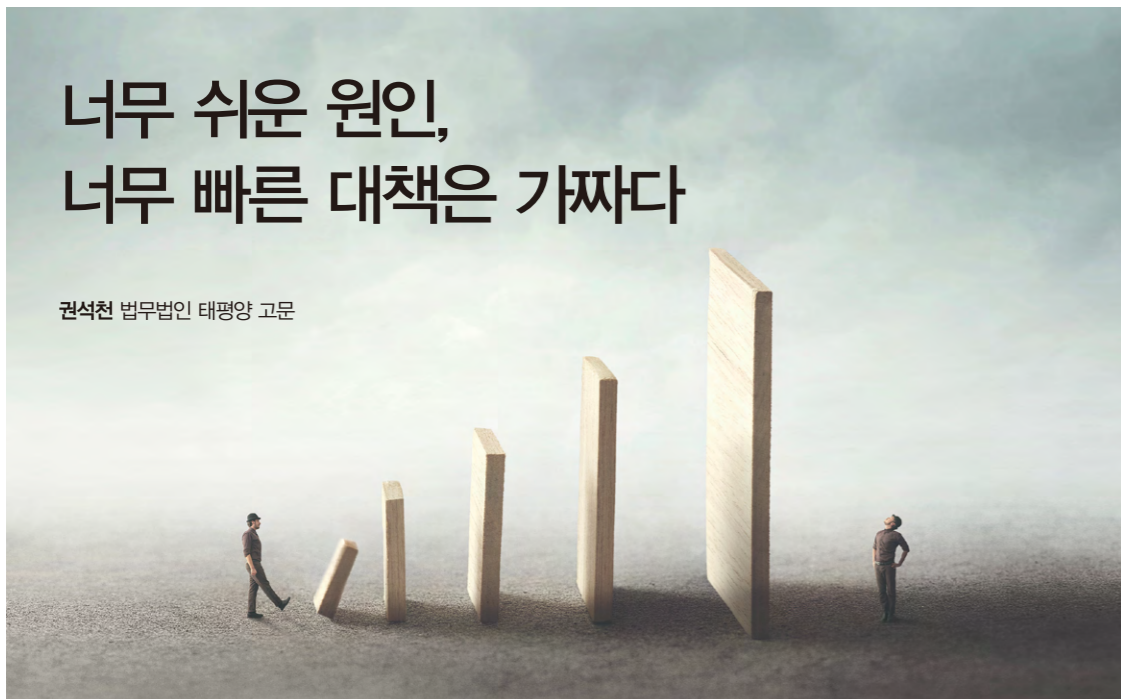


너무 쉬운 원인, 너무 빠른 대책은 가짜다

권석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내려는 습성

“우리가 사는 세계를 들여다보면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임에도 억지로 누구 때문이라고 떠넘기거나 자기 책임이라며 떠안는 상황이 종종 눈에 띕니다...독감에 걸리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탓, 암이나 당뇨병에 걸리면 평소의 생활습관 탓을 하는 것이지요.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그렇게 책임을 추궁 당하면 사회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립니다.”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미야노 마키코 등, 다다서재)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이 책은 말기 암 투병을 하던 일본의 철학자가 의료인류학자와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것인데요.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원인을 찾아내려는 습성’이 어떤 편견을 만들어내는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습관이 병을 낳는다’는 취지의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이런 류의 방송을 접하다 보면 특정한 질병 뒤에는 반드시 특정한 생활습관이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되지요.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했다면 면역력이 생겼을 텐데...’ ‘고기 섭취를 줄였다면 쓰러지지 않

았을 텐데...’ 그런 믿음들 속에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스스로를 탓하게 되거나 주변으로부터 “좀 조심하지 그랬냐”고 타박 받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비단 건강뿐일까요? 눈을 사회로 돌려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너무 쉽게 원인을 찾아내고 너무 쉽게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생각해봅시다.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대개 누구 책임인지부터 따집니다. “책임자 처벌” 여론이 커지면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고, 구속하고, 재판에 넘깁니다. 그러고는 모두가 훌훌 털어버리고 저마다의 일상으로 복귀하지요.

물론 크든 작든 잘못을 저질렀다면 응분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태를 지나치게 도식화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관련자가 작당해서 그 모든 일을 일으켰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인데요. 그들 역시 그 사태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러한 사정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태는 재발하고 처벌의 악순환은 이어집니다.

현안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주는 ‘밈줄 짝 유튜버’가 대세인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영 논리가 횡행하면서 이러한 단순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의 선의는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상대 편의 선의는 절대 믿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복잡하게 따지기 귀찮고 싫은 건데요. 복잡한 것은 복잡하게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복잡한 사안을 단순한 논리로 압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태를 한번 더 꼬이게 할 뿐이지요.

정치판에서도 중요한 현안일수록 길게 논의하지 않습니다. 현안을 방치하면서 여당은 야당 탓을 하고, 야당은 여당 탓을 합니다. ‘대화’와 ‘타협’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나 있는 사어(死語·죽은 말)일 뿐입니다. 그렇게 한바탕 치고 받으며 싸우다 보면 어느새 다시 선거철입니다. 이 얼마나 쉽고 간편한 정치인가요?

이번엔 누가 공쥐이고 누가 팔쥐인가?

원인을 쉽게 찾으려는 태도는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도 나타납니다. 한 시대를 보는 눈은 어디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또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말할 때는 어디에 서서, 무엇을 보려는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오항녕 전주대 교수(이하 경칭 생략)의 〈조선의 힘〉(역사비평사)은 바로 이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조선의 힘〉이 꼽는 대표적 사례는 조선의 광해군인데요. 그가 인조와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일까요? ‘반정 세력의 쿠데타로 부당하게 쫓겨난 임금’ ‘실용주의 외교로 백성들을 보호한 군주’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로 대처한 현실주의자’... 광해군에 대한 우리의 인



식은 대체로 우호적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내내 “혼군(昏君)”이란 비판을 받아온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바뀐 건 언제부터일까요? <조선의 힘>은 일제강점기부터라고 답합니다. 일본 식민사학자 이나바 이와키치가 광해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부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광해군=현실주의자’ 평가는 철저히 식민주의의 프레임 안에 있었다는 게 오항녕의 지적입니다. “힘의 강약에 따라 시세를 좇는 외교방식”을 현실주의로 치켜세움으로써 “식민지인으로 전략한 사람들을 골수부터 일본제국주의에 투항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쓰였다고 오항녕은 설명합니다.

임해군과 영창대군의 죽음, 국가 예산의 15~25%를 투입한 대규모 궁궐 공사, 기회주의 외교... <조선의 힘>은 광해군 시대의 정치를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조선의 사회와 백성들은 광해군 15년 동안의 시간을 잃어버렸다. 민생회복, 사회통합, 재정확보, 군비확충, 문화발전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이 반대로 흘러갔다.”

‘콩쥐-팥쥐 논법.’ 오항녕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말하는 ‘콩쥐-팥쥐 논법’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정책이나 견해를 선/악의 구도로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논법은 대중의 편견을 강화하고 시각을 편향되게 만들지요. 광해군을 “혼군”이라고 매도했다가 다시 “현실주의자”로 칭송하는 것처럼요.

“조선이 망한 것이 비단 고종 한 사람의 탓이었을까?” 오항녕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종이 군주의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운영했다면 상황이 조금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는 서구열강의 제국주의가 숨가쁘게 식민지 경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던 제국주의 팽창의 압력에 ‘약한 고리’였던 조선이 무너져 내린 것 아닐까? 그 사태를 통치자 한 사람이 막기엔 역부족 아니었을까? 오항녕은 조선의 멸망에 대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연사(自然死)할 만큼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격이랄까?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당한 것이다.” (<조선, 차라리 빨리 망했다면? ‘亡國 콤플렉스’에 하이킥!> 프레시안 2010년 8월 27일 기고)

고종의 잘잘못은 역사가들이 분명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 위정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정치를 할 것입니다. 다만, 한 사람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한 사람이 잘해서 나라가 흥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 아닐까요. 또, “고종 당시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비난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선악 구도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린 지금도 여전히 ‘콩쥐-팥쥐 논법’의 잣대로 세상을 보곤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쪽은 무조건 선이고 한쪽은 무조건 악이라는 구도는 틀릴 때가 많습니다.

역사든, 사회든 현실을 제대로 보려면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도, 일반적으로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선의와 악의, 이기심과 이타심, 개인의 욕망과 윤리적 의무감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선악의 점묘화를 그리는 것이 현실 속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콩쥐’가 있고, ‘팥쥐’가 있습니다. ‘콩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고 순수하고, ‘팥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활하고 악독하지요. ‘콩쥐’의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만 ‘팥쥐’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팥쥐’로 한번 찍히면 해명을 할수록 ‘악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런 짓을 해놓고 뻔뻔스럽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김보름 선수의 ‘노선영 선수 따돌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는 노 선수가 콩쥐였고, 김 선수가 팥쥐였습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김 선수가 콩쥐가 되고, 노 선수가 팥쥐가 됐지요. 그땐 김 선수를 변호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그 4년 후엔 노 선수를 변호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다.

언론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확하게 따져보기보다는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몰입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도 쉽게 선과 악이 나뉩니다. 진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선 한쪽 편을 악



마화하기 일쑤입니다. 도마에 오른 인물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너무 큰 대가를 치릅니다. 한국처럼 좁은 사회에선 움치고 펼 곳도 없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지는 경우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쪽은 적극적으로 방어해주니까요. 진영과 관련 없이 ‘팔쥐’로 몰린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40대 남성 배우 마약’ 보도가 있었는데요. 배우가 비틀거리고 길을 가다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로 확인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배우는 신경안정제를 먹고 집을 나섰다가 오해를 받은 것이었지요. 이후 인터뷰에서 그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 나라에서 못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저 역시 기자시절 비슷한 상황에 놓이곤 했습니다.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주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간 적도 많습니다. 다른 매체에 나온 보도를 놓고 데스크에서 “빨리 확인해보라”고 독촉하면 “대충 맞는 거 같다”며 엉겨주춤 추종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팀장이 된 다음엔 “일단 ‘주장했다’ 전해줬다로 기사 보내놓고, 정확하게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래서인지 10년, 20년 취재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자신감이 약해지고, 과감함이 줄더군요. 마음 한 구석엔 늘 찝찝함 같은 것이 남았습니다.

몇 년 전 한 학교에서 일어난 시험지 유출 사건을 취재했을 때 일입니다.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의 재판을 몇 차례 방청했습니다. 그 재판을 지켜보면서 의문 하나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가 과연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고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유·무죄를 떠나 어린 자녀에게 평생 거짓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과연 내가 부모라면 그럴 수 있을까?

팩트 중심으로 기사를 쓴 뒤 이런 의문을 답았습니다. 기사가 신문에 실린 뒤 주변 분들로 부터 조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기사는 잘 읽었는데, 앞으로 그런 거 쓸 때는 조심하는 게...” 우리 사회의 99.9%가 범죄자라고 여기는 사람을 옹호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약간의 좌절감이 느껴지더군요. 아, 다수가 나쁘다고 지목하는 사람에 대해선 작은 의문이라도 나타내면 위험한 거구나. 모두가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있을 때 아니라고 말하기는 정말 힘들겠구나.

인스턴트 해결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콩쥐/팥쥐’ 논법은 단순히 인식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비이성적인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보다 사람에 치우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팥쥐)이 바로 눈 앞에 있으니 ‘그 사람만 처벌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시스템을 고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뒷전에 밀어놓기 일쑤이지요. 대충 대책을 내놓고 고치는 시늉만 하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섬마을에서 교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 인터넷이 들끓자 여성 교사들을 도서 벽지 지역에 가급적 신규 발령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여성이 살해되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행정 입원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됩니다. 두 대책 모두 급조된 것으로 영성하기 그지없습니다.

깊이 고민하지 않은 대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다시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틀린 해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원인이 된 시스템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결국 사태는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너무 익숙해서 편안함까지 느껴지는 선/악 구도에 의심의 품을 때가 됐습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거나 일방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의심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진실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해도 한발 뒤로 물러서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양산되는 인스턴트 해결책들이 얼마나 든든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쉬운 사랑은 다 거짓말이죠. 그래 다 거짓말이죠...” 분명한 것은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가사처럼, 너무 쉬운 원인, 너무 빠른 대책은 모두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